

韓·美 防産協力

● Patrick J.O'Connell

Honeywell社 방위시스템부문
국제프로그램담당 理事

산 업협력은 새로운 과학이나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수십년간 성공과 실패를 겪으며 이루어져 왔다.

둘이상의 경쟁적인 조직들이 일반적으로 상업적인 협정을 통하여 같이 번영하고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방위산업에는 제3자인 정부가 이러한 협정에 개입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따른다. 이것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해당업체간에 상업적 협정으로 바로 이루어졌을 일을 복잡하게 만든다. 그 결과 단순히 경제적이거나 경제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할 문제들이 정치적인 고려사항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문제들을 조명하기 위해서 본인은 우리의 산업적인 시각에서 한국의 방위협력 역

사를 간략히 살펴보고 현재 또는 미래에 우리가 접하게 될 정치·경제적인 문제를 강조하며 상호 이해에 도움이 될수 있는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방산협력의 역사

Graves 장군이 지적하였다시피 1940년대와 50년대까지 한국에는 방위산업이 없었으며 대부분의 군사장비를 수입하여야만 되었다. 19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의 방위산업은 국내생산을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장비를 공급할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하였다.

1980년대에는 생산능력이 향상되면서 고도 기술과 무기개발능력 또한 증대되었다. 즉 자체 방산능력을 확립하려는 목표를 위해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현재의 상황

장래 방산협력의 성격은 방위산업에 있어서 한국의 고유한 능력에 달려있다. 현재 한국의 방위산업은 한편으로는 다양한 무기 및 방산 장비의 소요범주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실제로는 초과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

이 글은 韓國國防研究院과 美 국제문제전략연구소 공동 주최로 9월 12일과 13일 이틀간 KIDA 회의실에서 열린 韓·美 국방학술회의에서 발표된 것으로 한·미 방위산업 동향 및 발전에 示唆하는바가 크므로 옮겼습니다

(편집자 주)

로는 항공기와 같이 다른 형태의 무기체계를 생산할수 있도록 기술기반을 향상시켜야만 한다. 나아가서는 차기세대 무기체계의 개발과 생산을 이룩할수 있도록 무기설계 개발능력도 향상시켜야 한다.

이러한 전략적인 문제들은 한국이 자체 방위산업을 보유하고자 하면, 필요로 하는 협력의 형태를 부각시켜 준다. 거기에는 지속적인 공동생산계획이 필요할 뿐아니라 공동개발과 고도기술의 이전을 증대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인은 현재의 능력과 과거 산업협력의 결과로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제점 및 필요성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미국방위준비협회가 1987년과 1988년 한·미방산회의를 성공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한데 대하여 치하하고자 한다.

이 회의에서 거둔 많은 결과중 하나는 대두되고 있는 문제를 규정하고 논의할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양측 정부와 업체에서 다수 참가하여 서로의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이해를 하게 되었다. 물론 이번 회의도 이와같은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이제 문제점과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고도기술의 이전과 무기설계 및 체제 통합능력의 발전에 대한 필요성이다. 한가지 확실한 방법은 양국 또는 다국간 무기개발프로젝트를 확립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NATO 국가들과 맺은 Nunn 수정안과 같은 계획을 시작하는 것이다. 한국이 Nunn 계획에 참여할수 있는 나라에 속하게 됨으로써 이와

같은 일의 첫 단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경험으로 볼때 이러한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에 광범위한 계획과 기반이 필요하게 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은 우리가 유럽에서 얻은 교훈들중 일부로 이곳에서도 적용될수 있을 것이다.

- 첫째는 공동개발계획을 고려하고 있는 국가에서 무기체계 소요를 결정짓는 책임자들은 공통되는 소요에 분명히 합의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각국은 나라별로 독특한 필요성을 가진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은 종종 어려움을 겪는다.

공통으로 받아들일수 있는 소요를 확정짓기 위해 서로 다른 NATO의 소요그룹에 대해 심사숙고한 것을 돌이켜보면 이런 활동이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 가를 알수 있다.

과거에는 각국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유사한 프로그램에 합의를 하지 못하였던 예들이 있었다. 한·미간의 협력은 이점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며 공동개발을 고려할 때는 가능한 빨리 자체의 소요그룹을 결합해야할 것이다.

- 또 하나의 교훈은 빠른 시일내 업체가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업체의 참여에 대한 별다른 고려없이 공동개발계획을 위한 정부의 양해각서가 체결된 예들이 있었다. 그 결과 때로 상업적인 실용성이 없거나 계획의 기술적인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조건들이 합의되기도 하였다.

최근 미국의 업체들은 양해각서의 체결과 협상 초기단계부터 더욱 많이 개입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방식을 권장하고 있으며 한국측에도 기꺼이 권하고 싶다.

- 세번째 교훈은 참가국에 대한 고도기술의

공개에 대한 것이다. 초기에 해당정부가 전수 받거나 이전할 특정기술을 충분히 이해하고 규정짓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해가 없으면 계획은 지연되거나 또는 「불신」의 감정이 생겨날수 있다.

1988년 5월의 韓·美 방산협력회의에서는 공동개발계획이 기술과 기타 노·하우를 이전시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되었다. 분명히 이런 계획들은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주지만, 초기에 소요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 양해각서를 준비함에 있어 업체가 초기에 관여하는 것, 그리고 사용될 기술을 각 정부가 초기에 이해하는 것 등의 중요성은 간과되어서는 안될 요소들이다.

두번째 문제점은 절충교역과 무역장벽에 관한 것이다.

한·미간의 무역불균형에 비추어 볼때, 미국의 국회의원이나 상당한 數의 미국인들은 방위산업의 절충교역에 대한 한국의 필요성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직접절충교역도 미국방위산업체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한국이 방위산업의 기반을 강화해야하는 필요성으로 이해되고 또 일반적으로 容認되고 있다.

하지만 간접절충교역의 필요성은 그렇지 않으며, 이런 면에서 간접절충교역에 대한 한국의 정책이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자유무역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미국에서 환영받고 있다. 그것은 미국에서 보호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약화시킬 것이다.

업체의 많은 사람들은 절충교역을 국제시장의 한가지 「생활방식」으로 간주한다. 우리는 우리자 상업적 이익을 볼 경우에는 절충교역 협정을 맺을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해 주기를 원한다. 우리는 방산업체들이 이런 협정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이 통과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절충교역에 관해 현명한 입장을 취하고 무역장벽을 낮춤으로써 미국에서 보호주의법안이 제정될 가능성을 줄이기를 원한다.

세번째 문제는 면허하에서 생산된 방산제품의 제3국 판매에 관한 것이다.

본인이 규칙에 대한 예외로 믿고 있는 M-16 소총 계획은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데 사용될수 있다. 장기간의 협력은 상호신뢰에서만 생겨날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어떤 협정의 체결도 존중되어야 한다. 업체의 입장에서는 지적인 권리를 다른 업체에 제공할 때는 그 업체가 「노-하우」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득을 얻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로 금전적인 이익을 얻고자 할것이다. 하지만 그 「노-하우」가 규정되지 않은 시장에 판매를 하는 것과 같이 협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사용될 때는 면허를 제공한 업체에 손해가 될수 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지적인 권리의 정당한 사용과 보호에 대해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한다.

또한 M-16 소총 프로그램을 보면, 협정을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대두된다. 협정을 위한 조건들은 분명히 記述되어야 할뿐 아니라, 협정에 망라된 협정준수 감시행위의 내용도 분명히 정의되고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요약컨대, 업체의 관점에서 볼때 제3국 판매는 면허협정내에 明記되고 認知된다면 어떤 문제도 야기시키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상업적 목표와 정치적 목표간의 잠재적인 갈등에 대해 밝히

고자 한다.

업 체에서 산업협력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의 불필요한 간섭으로 느끼는 것에 대해 불평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정부가 우리의 기술과 다른 자산이 기존 국가 정책이나 목표에 일치되지 않으면 사용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고, 무기나 민감한 자료들이 「바람직스럽지 않은 집단」으로 들어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출을 통제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나아가 상업적으로 그 자료 및 기타 지적인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우리의 목표가 정부의 목표와는 어느정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협력계획을 시행할 수 없으며 제약을 받는다고 느끼고 있다.

예를 들어보면

- 첫째, 대다수의 경우 매 件別로 다루어지는 제3국판매에서 승인을 얻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다. 최적의 상태로서 업체는 「제3국」 판매가 후일 언급될 것이라고 규정되는 것보다 「제3국」 시장이 면허 협정내에 명기되고 승인되기를 원한다.

- 둘째, 정부와 사기업의 지적권리가 공히 관련된 공동생산계획에 대해(정부와 사기업의) 양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면허협정을 위한 필요성과 관련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우선적으로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사기업이 미국 정부로부터 면허를 획득하고 나서 공동생산업체와 전체적인 협정을 다룰 때 美 정부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것이다.

- 셋째, 잠재적인 절충교역규정과 보호주의 법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다.

- 끝으로 적절한 시점에서 협력계획에 사용할 기술과 제품을 공개할 필요성이다.

본인은 위와 같은 사항들이 계속 문제가 될 것이며, 상대의 책임감을 인식하고 있는 각 부문에 제기될 것으로 믿는다. 첨언하면 최근 미국정부의 보다 더 협조적인 입장으로 이런 문제들은 다루기가 더욱 쉬워졌다.

결론에 앞서 방위산업의 세계적인 현황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과거 수십년간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 자체의 방산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은 당연하였다. 그 결과 자유진영의 많은 업체에서 능력과 시설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전시키게 되었으며, 이러한 초과생산능력은 해외 판매를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 각국은 신무기의 정교함과 복잡성으로 개발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는 방위산업을 국내사업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

우리가 자유진영의 방위필요성을 적절한 비용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서로의 능력을 채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더 많은 공동개발과 공동생산계획을 필요로 한다.

요약하면 방위산업이 국내에서 국제적인 사업으로 변화하는, 세계화로 되는 시점에서 한국은 여전히 자체능력을 개발해 나아가야 할 필요에 직면하고 있다.

공동개발과 공동생산이 강조됨으로써 한국은 원하는 기술능력을 선택적으로 향상시킬 좋은 기회를 가질 것이다.

이미 방산의 능력이 초과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신중하게 행동한다면 국가적인 목표를 충족시키고 상호의 방위목적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